

권법)에 따르면,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이나 카페에 노래가사를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깔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작권자 외에도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게까지 전송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서 창작물에 대한 모든 복제와 전송행위를 위법
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투피(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파일이나 저작물을 공
유하는 행위 △ 음반 매장에서 구입한 씨디(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공유하는 행
위 △글귀나 그림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등 지금까지 네티즌
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정보공유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반업체들의 대대
적인 단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것은 물론,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한
것.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인터넷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보공유연대 양희진 활동가는 "인터넷에서의
정보공유는 새로운 창작을 위한 마당을 제공해 왔다"며 "네티즌들의 손과 발을 묶는
저작권법으로 문화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
터 등 인권단체들도 17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을 성장성 있는 공간으로 키운 것은 정
보를 자유롭게 나누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온 네티즌들의 공"이라며 "하지만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장만 남기고 네티즌들은 쫓아내겠
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네티즌들의 항의도 거세지고 있다. '나도범죄자'라는 아이디로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란에 글을 남긴 한 네티즌은 "음반사 등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다가 결
국에는 온 국민 모두 범죄자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어처구니없
어 했다. 'NO MUSIC, NO BLOG'라는 인터넷 동호회에 '물파스'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저작권법은 온라인 음악의 모든 것을 음반업자들의 통제 아래 두겠다
는 발상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온라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음반 불
매운동 등을 벌이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권리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대
안은 없는 것일까. 양 활동가는 "비영리적인 행위들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서 이루어지는 전송이나 복제는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
영되는 정부생산정보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나아가 정보공유를 원하는 저작자의 의사를 몇 가지로 정형화한 일종의 약관인 '정보
공유라이선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정보공유라이선스
는 저작자가 △영리·개작 허용 △영리 허용·개작 불허 △영리 불허·개작 허용 △영
리·개작 불허의 4가지 유형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보이용자는 저작자가 채택한 라이선스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안심
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이용자가 허용범위를 넘어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작
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보공유연대 등 사회단체 및 학계
인사들이 모여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공식 선포하고, 홈페이지(www.freeuse.or.kr)를
통해 확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② 이라크 전범민중재판

풀뿌리 평화 운동을 꿈꾸며

법정형식의 운동은 가깝게는 조선일보 민간법정이 있었고, 몇 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5.18 민간법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2004년 진행된 이라크 전범 민중재판운동을 대안
적인 인권운동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전쟁반대운동은 이라크 전쟁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전쟁반대운동은 발생하는 이슈가 있고 없음에 따라 심하게 굴곡을 그려오기도
했다. 민중재판운동이 제안되던 당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김선일 씨 죽음을 계
기로 파병반대운동이 대중적으로 일어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운동 또한 점점
힘을 잃어갔으며 추가파병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란 문제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
다.

민중재판운동을 고민하던 사람에게 이 문제는 적어도 한국 반전운동의 실천양식과 판
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슈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와 대국회 압박이
라는 운동방식을 반복해 오다보니, 이슈가 없어진 시기에 풀뿌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로 어떤 반전운동을 벌여야 하는지 기획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단체 간 연대
라는 연대운동방식이 과연 개인들과 소모임들 간의 활동을 고무하고 소통시키는 데 기
여하고 있는가라는 점도 고민의 화두였다. 2004년 추가파병이 이루어진 이후 가장 끈
질기게 저항했던 이들은 오히려 박기범, 김재복 씨 등 개인과 공부방 같은 지역의 작
은 모임들이었고, 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소통해나갈 수 있는
연대운동의 새로운 실험도 필요했다.

민중재판운동에서 기소장을 쓰는 운동이 가장 강조되었던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몇몇 전문가의 국제법적 지식에 기대다면 더욱 훌륭하게 민중법정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기소장을 쓰면서 전쟁을 다시 기억해내고, 직접 이라크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과정을 만들으로써 반전운동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이슈 쫓기에 급급했던 기존 반전운동의 활동방식을 넘어, 우리의 요구를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직접행동의 한 전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풀뿌리 대중이 자기 이유에 근거해 참여할 수 있는 운동형태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민중재판운동에선 전쟁을 부당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유랑' 활동을 내내 진행했다. 유랑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의 모임들이나 공부방 같은 소모임을 찾아가 이라크를 이야기하는 일, 혹은 거리와 대학가에서 문화적인 방식으로 시민을 만나나가는 일, 이라크인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전쟁 중단대회를 열었던 일 등.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 예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트고, 또 다른 반전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여러 개인들과 소모임들 간에 정서적인 연결망을 낳았다. 민중재판이 마무리된 지금 이 시점에도 그때의 연을 바탕으로 새롭게 운동이 제안되고, 또 몇몇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평화를 실천할 평화운동모임이 고민되고 있다는 것은 유랑이 남긴 좋은 성과 중의 하나다.

사실 민중재판운동이 간직했던 화두와 실험이 아주 새롭거나 거창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운동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대중과 직접 대면하면서 운동을 해보려 했던 실험이었을 뿐이었고, 그 만큼 한계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고발과 심판운동이 사회적으로 환기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는 점, 의욕을 가지고 실행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실험해보았던 개인참여에 바탕을 둔 수평적 조직형태가 운동의 책임성과 소통의 활성화라는 문제에 있어 여전히 한계를 보였다라는 점, 풀뿌리 운동의 활성화라는 이 운동의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동등 곱씹어봐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한계가 아닌 과제로 인식하는 이유는 '대중 속으로'라는 포기할 수 없는 이 운동의 정신이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이다. [손상열]

◎손상열님은 평화인권연대 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20일 (목)
제 27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불법파견' 이용한 대체인력 투입
2.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③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3. <긴급토론회> "목적별 편제나, 혼합형 1인 1직제나?"

'불법파견' 이용한 대체인력 투입

현자비정규노조, 정규직화 요구하며 파업

(주)현대자동차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아래 비정규노조)가 18일부터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이에 대해 회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현재(19일) 공장 탈의실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1·2·3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노조 소속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해 잔업을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노조의 파업으로 18일에는 5공장의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못했고, 1·2·3공장 생산라인도 잔업거부로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18일 야간부터 '한시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에 대해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정규노조는 "회사가 정의행위 이전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애초 비정규노조는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20일부터 잔업거부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13일, 회사측이 대체인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디어 참세상>에 따르면, 비정규노조는 "5공장에 13일 5명, 14일 추가로 7명 등 총 12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대체인력 투입에 대비해 한시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미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 이를 확인한 비정규노조는 15일, 5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이어 특근잔업을 거부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인 (주)현대자동차는 비정규노조 정영미 대의원에 게 책임을 물어 17일에는 업체 게시판을 통해 일방적으로 해고통지서를 공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정규노조는 20일부터 계획된 잔업거부를 18일로 앞당겨 전격적으로 파업과 잔업거부에 들어간 것이다.

정규직노동자들의 연대도 이어져 18일 3공장에서는 정규직노동자들이 대체인력 투입에 반발하면서 실제로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해 생산라인이 멈추기도 했다. 앞서 17일에는 현대자동차(정규직)노조 전·현직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에 대해 더 이상의 묵인, 방조하는 것은 공동범죄행위"라며 "합법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올바르게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노조의 잔업거부 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아르바이트 투입 불가 △관리자를 통한 직영노동자 작업배치 불가 △타 협력업체 비정규직 투입 불가라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원·하청 관리자들은 1개월 고용계약을 맺은 한시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노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며 대체인력 투입을 강행했다.

하지만 노조의 정의행위에 맞춰 회사측이 한시하청으로 1개월 고용계약을 맺는 형태가 대체인력 투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는 비정규노조의 정의에 대응하는 (주)현대자동차의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2004년 현재 아산사내하청지회가 잔업거부와 파업을 벌였을 때에도 회사측은 1개월 고용의 한시하청을 투입해 문제가 됐다. 당시 현재 아산사내하청지회는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 11월 1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정의행위신고서를 접수해 합법적 정의행위 권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사업주들은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 17일 민주노동당 단명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고소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체인력과 같은) 불법행위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18일 (주)현대자동차는 현자비정규노조에 "업체 탈의실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비정규노조는 "손배가압류·형사고발·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 등 현장에서 동료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

불 수단은 없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잔업·특근거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번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 산하 120여 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1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불법'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이들을 직접 고용할 계획을 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자 울산공장은 비정규노조에 대해 '집회및 시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하며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③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방방곡곡 울리는 평화의 몸짓

평화유랑단 평화바람은 이라크 전쟁반대, 한국군 파병철폐, 평택 미군기지 총집결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며 2004년 한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사람을 불러모아 얘기를 듣게 하기보다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 했고,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대면하고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유랑단은 2003년 겨울, 서울을 중심으로 파병철폐를 위한 거리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 5월29일 벌어진 평택 평화축제를 알리기 위한 전국순회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7월에는 전국도보행진을 전쟁피해자들과 함께 했고, 파병철폐를 요구하며 오랜 기간 단식을 한 김재복, 박기범 님과 함께 철군과 종전을 위한 단식순례를 9월 내내 진행했다. 이어 2004년 마지막 일정으로 전범민중재판 기소인을 모집하며 전국을 돌았다.

유랑단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유랑단은 거리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북으로 난타도 치고 퍼포먼스도 했다. 이 거리공연이라는 것이 얼핏보면 그럴싸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공연경험이 전무한 아마추어들의 황당한(?) 몸짓이기도 했다. 하지만 뿔수가 거듭할수록 나름대로 노하우라는 것이 쌓이면서 어떤 것이 좋은 표현인지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잘한 공연이 아니라 '잘 표현한' 공연이다. 투박하고 어설피도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느낌이 잘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사람들은 집이나 문화제에 전문 공연자를 불러오려 하지만, 정작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이 가장 많은 사람 중 하나인 자기 자신이 스스로 표현을 해보려는 노력은 잘하지 않는다. 유랑단은 뛰어난 공연자 열 명을 부르는 것보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하나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임을 유랑을 하면서 거듭 깨달았다.

유랑단이 주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미디어를 거쳐서 만들어진 정지된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리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다. 현장에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직접 호소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더 선호하게 된다. 파병에 반대한다고 해서 모든 곳에 '파병반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메시지가 강렬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시작된 퍼포먼스는 군인 분장을 한 연극자가 '군인은 집에 가고 싶다'는 글씨의 발판을 놓고 사람들 한가운데 동상처럼 서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글씨와 분장 외에 아무런 설명이 없는 퍼포먼스에 사람들이 모이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람이야, 마네킹이야?"부터 시작해서 "군인이 왜 집에 가자는 거야?"라는 얘기까지. 만일 모든 것을 미리 설명해 버렸다면 사람들은 메시지만 보고 그냥 자기 잘 길을 가버렸을 것이다. 표현하는 이와 구경하는 이 사이에 인식의 간격을 주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소통의 씨앗을 심는 방법이 바로 은유적 표현인 것이다.

실제로 길거리에 나서서 아마추어 공연자가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시선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다. 유랑단 역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었지만, 냉담한 반응과 차가운 시선에 상처 입을 때가 훨씬 더 많았다. 하지만 유랑단이 원하는 것은 스스로 뛰어난 공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서있는 사람이 이 어설피 몸짓에 동행이 되길,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이 모든 문제들을 몸으로 풀어내길, 그리고 우리의 흥이 거리를 뒤덮어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에 있어 대안을 찾듯이 표현에서도 대안적 방식이 필요하다. '문화적 접근'이란 전문 공연인의 공연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느낌, 마음을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재능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 부족했지만, 지난 1년간의 유랑단의 활동은 '대안적 표현'을 위한 작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고철 님은 지난 한해동안 평화유랑단에서 활동했습니다.

<기사 처음으로>

<긴급토론회> "목적별 편제냐, 혼합형 1인 1직 체냐?"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

일시: 2005년 1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의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사회: 이종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제 1: 가족해체담론과 차별_타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발제 2: 개별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 비교_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자유토론자: 대법원, 법조계 등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21일 (금)

제 27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2. '새만금 공사 중단 환영'
3.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20일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회당 니시무라 간니치 참의원에게 "전향을 강요당하며 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일본으로 돌아간 그는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고발했다. 이후 '서승 형제를 구하는 회' 등 단체들은 일본 주 오사카 영사관에 찾아가 고문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총영사는 한국 외교부에 현지상황을 알리며 고문사실을 절의한다. 이에 외교부가 '사실 무근'이라며 고문 사실을 부인하는 답변의 문서들이 이번에 공개된 것.

이에 대해 서준식 씨는 "외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전향공작에 의해 죽은 사람 이름까지 다 밝혀내는 등 당시 고문이 없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이 난 상태"라며 공개된 문서가 거짓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서 씨는 "처음에는 방문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단지 일본 의원 뺨지를 달고 있는 걸 보고 절박한 심정에 고문 사실을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중앙정보부 직원들과 교도관 등이 "거짓말이다. 그만하라"고 고함을 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했다. 결국 모든 사실을 다 듣지 못했지만 니시무라 의원은 "사상과 양심의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서 씨를 격려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에서 법무부는 "학대한 사실이 없어 책임문제가 있을 수 없다. 서준식은 현재 건강하다"며 고문 사실을 적극 숨겼고, 심지어 "서준식의 접견 후 동의원(니시무라 참의원)이 광주교도소장에게...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서 절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거짓 사실로 답변을 대신했다.

폭력적인 강제전향공작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73년 '전향공작반'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의문사위 전 조사1과장 염규홍 씨는 "서 씨가 고문 사실을 폭로한 당시에는 각 교도소마다 전향공작반이 설치되어 있었고, 폭력 채소자까지 동원하며 고문을 용인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의문사위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인 전향공작으로 73~75년 광주교도소 9명, 대전교도소 4명, 73~76년 대구교도소 5명, 73~78년 전주교도소 2명 등이 생명을 잃었다.

염 씨는 공개된 문서에 대해 "외교부와 법무부 등 각 정부 부처들이 독재정치를 지지하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은폐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 정부의 진지한 반성은 아무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외교부 등이 고문을 증지하도록 노력했던 사람들의 뜻을 따랐더라면 서 씨의 고발 이후에 벌어진 고문과 그에 따른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가움을 표했다.

<기사 처음으로>

"새만금 공사 중단 환영"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법원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특

정과 개발범위를 검토·결정할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공사 중단을 결정한 셈.

20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아래 평화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년간 표류하던 새만금 문제에 대해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조정권고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이미 시화호와 화옹호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규모 갯벌매립은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되었다"며 "사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새만금의 갯벌이 매립되었을 때 환경적인 재앙이 발생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되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정부측의 태도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은 새만금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늦지 않았다는 판단을 보여준다"며 공사 중단 결정을 환영했다.

새만금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가치를 지니는 환경보고로서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지만, 새만금 갯벌을 단숨에 없앨 수 있는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은 개발지상주의와 정치적 논리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온 대형 국책사업이었다.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은 1998년 '새만금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발족시켜 갯벌을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새만금 문제'는 대표적인 환경현안으로 부각되어왔다.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은 국제적인 습지보호운동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고, 2003년 문규현 신부, 수정 스님 등 4명의 성직자가 전북 부안 해장갯벌에서 서울까지 실시한 3보1배 행진은 그 해의 '지구촌 10대 환경뉴스'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갯벌을 매립하여 농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예초의 계획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공식적으로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의 방조제공사 집행정지결정 선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4년 1월 서울고등법원의 1심 결정취소 및 신청기간 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돼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사가 지속돼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확정판결 기한까지 정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평화연대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정부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새만금 문제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연대가 밝힌 바처럼 "새만금 소송에서 갯벌보전의 승리로 판결되기를 희망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법부의 조정권고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오랫동안 끌어왔던 '새만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십' 강조

2기 국가인권위 최영도 위원장을 만나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왔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대답의 핵심만 정리했다.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sarangbang.or.kr/maybbs/view.php?db=sarangbang&code=data&n=233&page=14>)란에서 볼 수 있다.

- 2기 인권위 위원장을 수락하게 된 문제의식을 밝혀 주기 바란다.

= 빈부격차의 심화, 대량실업,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아동·여성·노인·빈민들의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등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더욱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2기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기에 대한 평가는?

= 설립 초기에는 '인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라는 위상도 설득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독립적인 국가기구'라는 게 모두에게 낯설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1기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큰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 사회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의 정책은?

= 1기에서 축적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정책검토를 활발히 할 것이다. 사회권과 관련한 문제는 재정투자와 사회적 비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도 연계해 검토할 예정이다. 직권·방문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아동, 노인복지시설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하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 실태조사를 구상 중이다. 이 분야는 국가 전체 정책과 예산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장기적 실행과제라고 본다.

-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비정규 TF팀)에 대한 평가는?

= 비정규 TF팀이 주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간접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비정규 TF팀의 활동을 인권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정도로 외부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다. 이 점

은 대단히 죄송하다. 비정규직 권고안은 올해 마련할 계획인 NAP와 연계해 검토 작업하고 있는 중이며,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권고할 예정이다.

- 업무 중 개선되어야 할 점

=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점은 위원회가 작성하는 문서가 너무 길고 복잡하여 이를 간소화 정형화하고 결재단계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

- 운영규칙상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 인권 관련 사항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으므로 이점 양해를 바란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밀주의가 있다면 고칠 필요가 있는데 인권단체가 개정운동을 하면 비합리적인 부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 정보브리핑이나 기자회견 등 홍보기능을 강화할 의사가 있는지?

= 최대한 공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을 유념해서 반드시 고치겠다.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확실히 공개하겠다

- 인권의 가치와 법률적 잣대가 충돌시 극복방안은?

= 설립취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인권이 실정법보다 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으로 현실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소시효의 경우, 실정법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국제법에서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권고나 의견표명은 '인권'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 1기에서 노조 문제에 지극히 보수적이었다. 이에 대해?

= 노동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 노사문제나 노동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노조활동 역시 다른 어떠한 사안과 마찬가지로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검토하겠다.

- 1기는 인권단체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진단과 앞으로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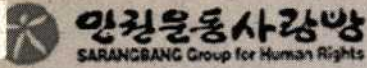
= 인권위의 설립은 무엇보다 인권단체들의 투쟁과 열망의 산물이다. 1기와 관계가 꼬였는데 왜 그랬는지 안타깝다. 이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부족했던 탓이 아닌가 싶다. 2기는 인권단체와의 관계 정상화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인권단체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인권교육, 국제연대사업, 기획조사사업, 인권실태조사 연구 등 각종 추진사업에서 인권단체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며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권단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대표 사업도 발굴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질문: 범용 / 정리: 김정아]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22일 (토)
제 27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논평> 천성산을 죽일 셈인가
2. 강의석 씨 퇴학 "무효"
3.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④ 고대 청소년노동자들 투쟁
4.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논평> 천성산을 죽일 셈인가

거대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속철도(KTX) 공사가 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살아 있는 모든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있다. 생명을 내어놓고 87일째 천성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는 지울 스님도 자본의 개발 논리 앞에 파괴되고 있다. 도룡뇽을 비롯한 못 생명들과 천성산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더불어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개발의 주체가 되어버린 거대한 국가권력 앞에 무기력해지고 있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되뇌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경제개발! 지역발전! 국토개발! 고도성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개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농업·공업용수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시화호 사업은 이미 그 답을 내놓고 있다. 의사 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거수기로 전락해 어업 등의 생계의 터전을 빼앗겼던 주민들, 주변 도시의 인구 및 공장 증가로 오염 물질이 대량 유입되면서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까지 겹쳐 '색은 물이 넘실대는 죽은 호수'로 변한 시화호는 결국 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인간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소수 건설자본의 이익 뒤로 내팽개쳐졌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더불어 숨쉬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천성산 관통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의 혜택도 차별적으로 주어진다. 고가의 이용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고속철도는 그저 꿈의 철도에 불과하며,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이들은 이용 자체를 제한 당했다.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해 다른 열차의 배차 간격이 길어져 가난한 이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한다. 반면 개발로 인해 발생 하는 재앙은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개발이 가져다 준 '빠름'은 노동자들에게 '여유'가 아닌 더 많은 일을 수혜 낼 것을 강요하고 있다. 마구잡이식 공사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삶의 터전에서 추방당한 이들은 새로운 생계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해 생존권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경제적 손실만을 내세우며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1일 지울 스님은 단식 해제 조건으로 △발파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만을 진행 할 것 △3개월간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천성산 관통 공사가 가져올 비극을 고려할 때 '상생의 길'이란 정부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길뿐이다. 또한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반대 투쟁이 거대한 권력과 지울 스님의 싸움으로 되지 않기 위해, 법정 다툼 싸움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다시금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도 손에 손에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기사 처음으로>

강의석 씨 퇴학 "무효"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 진행 중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 단식 등을 벌이다 학교에서 체적됐던 강의석 씨가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강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

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종교교육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라도 (학생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학생 의사에 반해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강 씨는 지난 12월 발표된 수시입학 합격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7월 8일 학교측이 '(강 씨가) 학생회장의 신분으로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며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등 교직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 씨를 퇴학처분하자, 강 씨가 같은 달 29일 법원에 퇴학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당시 강 씨는 "전체 학생 중 1/3 정도만이 종교가 기독교이고 나머지는 다른 종교이거나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들이는데도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했다"며 "이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며 종교의 자유를 강조했다.

강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면서도 한편으로 "학내 종교의 자유 문제가 부각이 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현재 강 씨는 '학교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토대장정'을 17명의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부산을 출발한 이들은 482.6킬로미터를 걸어 23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해단식을 진행하며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강 씨는 "겨울이라 힘들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 문제를 특정 학교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어 열심히 알리고 있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강 씨는 국토대장정이 끝나는 23일부터 학교내 종교 문제로 인한 차별과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④ 고대 청소용역노동자들 투쟁

그들과 함께, 그 곳에서

고려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다시금 곱씹는 것은 그 투쟁이 저임금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거나 사회권운동의 앞길을 '뻗어주었다'거나 해서가 아니다. 고려대 투쟁은 요구나 성과 모두 어느 비정규직 노조 설립투쟁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투쟁의 과정만큼은 분명 색달랐다. 노조설립투쟁에 인권운동이 처음부터 결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이라는 '거창한' 과제를 두 어깨에 걸고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아래 인권팀)이 유독 고려대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주목한 것은 몇 가지 기대 때문이었다.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의 핵심적인 목표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의한 인권침해 당사자들과 함께 싸우는 투쟁을 만들자는 데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당사자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대학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저임금노동자들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을 뿐더러, 학생-졸업생-교직원 등으로 투쟁주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게다가 고려대에는 학내 저임금노동자 문제로 꾸준한 활동을 벌여온 학생모임 '불철주야'가 있었다. 실제로 인권팀은 노동자들과 신뢰를 쌓는데 있어서 불철주야의 덕을 톡톡히 봤다.

5월 노동절을 맞아 불철주야가 주선한 간담회에서의 서먹한 만남을 시작으로 인권팀은 그해 늦봄과 한여름을 노동자들과 함께 냈다. 고대 청소노동자들의 출근시간은 새벽 5시이다. 근로계약서상의 출근시간은 아침 7시이지만, 그렇게 출근해서는 일인당 5백 평에 달하는 광활한 담당구역을 청소해낼 수 없다. 학교와 용역업체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새벽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금에서도 빼 왔다. 그렇게 일하고 받는 임금은 예누리도 없는 65만원!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서다. 월차니 연차니 하는 휴가는 애초에 허용되지도 않았다. 반장, 소장격의 남성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협박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예 일상이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일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계약 해지. 10년을 넘게 일해도 매년 계약약 시기가 되면 해고의 칼바람이 나무끼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 그들의 신세다.

인권팀은 우선 기본적인 생활조차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부당한 인권침해임을 말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들고 학교를 누볐다. 귀꼬리만한 임금으로는 병원도 여행도 갈 수 없는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삶이 저임금의 인권침해를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 여명의 노동자들이 진정에 참여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즈음 재계약 시기가 닥쳐왔다. '이번엔 60세 이상은 고용승계 안 시켜준다더라', '야간근로까지 해야된다더라'... 이에 주기적으로 모여 노동조건에 대한 의견교환을 해왔던 백 여명의 노동자들과 학생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은 6월초부터 매일 총회를 개최하고, 공동대응을 논의해왔다. 그 즈음 고려대는 용역입찰업체 프리젠테이션을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노동시간연장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인권팀은 사회단체들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고용승계보장과 노동강도 강화계획 철폐'를 요구하는 사회단체 집회를 고려대 본관 앞에서 벌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도 높아져갔고, 본관 앞 집회와 본관 점거 투쟁을 함께 이어 나갔다. 결국 학교는 진원 고용승계 보장과 정년제한 삭제를 용역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약속을 통보해왔다. 감격스러운 반쪽의 승리였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노조를 결성했다.

고려대 청소용역 노조설립 투쟁에는 '선수'가 따로 없었다. 매일 열린 총회에서 백여 명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했다. 모든 결정은 토론과 전체 합의로 이루어졌다. 해고의 칼날을 바로 눈앞에 두고 노동자들은 참으로 힘든 결정들을 용기 있게 내렸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당당해져갔다. 노조가 설립된 후에도 인권단체들과 불철주야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계속 이어갔다. 이젠 노동자들의 정치집회에 이들과 마주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이들의 살아있는 증언을 듣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인권운동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광범위한 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권리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각 없이는, 아무리 과학한 삶이라도 그저 참을 도리밖에 없다고 여기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좋은 권리보장제도라도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시혜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사회권 영역에서 권리주체를 조직화하는 운동의 기획은 더욱 요청된다. 고대투쟁은 정규직화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인상투쟁으로 그친 점 등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인권팀은 그 속에서 권리주체 조직화라는 사회권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본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저임금노동자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수도세 못 내 물이 끊긴 사람들, 모여 살 집을 못 구해 흩어져야 하는 가족들,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인권침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권 운동이 만나야 할 권리주체들이다. 따로 따로 떨어진 점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소통하고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권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기사 처음으로>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궤도에 올랐다. 대법원이 제안한 혼합형 1인1적제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19일 전달했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아래 목적별연대)는 2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써 '목적별 편제'와 '혼합형 1인1적제'를 집중 검토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에 있어서 제기되는 논점 중 하나는 본인의 신분증명에 가족관계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대법원은 혼합형 1인1적제를 통해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를 함께 담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목적별연대가 제시한 목적별 편제 방식은 한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사건)에 따라 분류해 기재하기 때문에 가족사항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가족의 신분등록부를 검색할 수 있는 연결번호를 개인의 신분등록표에 기입함으로써 가족관계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권하루소식 2005년 1월 13일자 참조>

이러한 방식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가족해체', '국민정서' 운운하며 비판하지만, 국내에서 이미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정화된 가족 틀을 상정하고 있는 대법원 안은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담은여성연대 다리 활동가는 "가족해체의 다른 말인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해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오히려 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모든 형태의 가족을 제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인적 편제 방식이 아닌 목적별 편제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 반면, 대법원 권순형 법정책심의관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기존 가족 개념을 넘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2000년 가족의 형태별 분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부부와 미혼자녀'는 57.8%, '편부(모)와 미혼자녀'는 9.4%,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는 6.8%, 부부는 14.8%, '기타 가족'은 10.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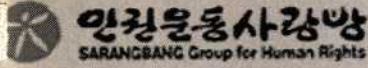
한 편으로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으로 제기됐다. 각 공무반의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분석한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목적별연대가 제시한 목적별 편제의 방식이 공공기관의 민원 사무에 있어서 비록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을 막고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사무 이외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개인신분등록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월말까지 새로운 신분등록제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25일 (화)
제 27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스러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2.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3.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4.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천> ㉢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스러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신으로 종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사측의 탄압으로 인해 또 하나의 생명이 불길에 스러져가고 있다.

22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아래 비정규노조) 소속 최남선 조합원이 현대자동차노조 사무실 옆 화장실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최 씨는 분신현장에 요구사항을 남기지 않는 않지만 분신 이후 동료들에게 "나의 희생으로 조합원 비조합원 가리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전신 15%, 2도 화상을 입고 현재 대구 푸른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비정규노조는 회사측의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18일부터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회사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하기는커녕 비정규노조의 파업에 '대체인력'으로 1개월 계약의 한시하청 노동자들을 투입해 불법성 논란을 일으켰다.<인권하루소식 1월 20일자 참조> 비정규직노조는 5공장을 중심으로 파업을 지속했고 다른 1·2·3공장의 조합원들도 작업을 거부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해왔다. 급기야 지난 21일에는 회사측 경비대가 공장 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이성환 씨 등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 씨의 분신 이후 현자비정규노조와 (정규직)노조는 23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최 씨의 분신은) 현대자동차의 불법과 폭력에 맞선 치절한 저항"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살인적 폭력과 탄압이 (분신의) 직접적인 계기"라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원하청 공동투쟁'을 간절히 염원한 최남선 동지의 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해...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기필코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일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 앞에서는 현자의 불법파견에 항의하는 집회와 1인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평등세상을 위한 노동자민중 실천연대' 집회를 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전국타워크레인노조 이수중 위원장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는 지난 18일부터 현자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국보연대, 국회 앞 농성 돌입...전국 릴레이 촛불 대행진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2004년을 정리해야 했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보연대)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금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24일 국보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6년만의 기회를 놓친 정부여당은 민생과 개혁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며 이제는 민생과 경제를 핑계로 국보법 폐지 과제들을 한없이 뒤로 미루려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민생, 경제는 반민중적이고 반개혁적인 정책이나 악법들이 허다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시도하고 있어 기가 찰 노릇"이라

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열우당은 과반수가 무너질지 모른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에게 사이비 정당, 국민기만적 정당으로 낙인찍혀 정치적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열우당은 국보법 폐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은 중앙실천단을 조직해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등을 2월 4일까지 돌며 '전국 릴레이 촛불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 수구세력들이 과거 정권의 안보를 위해 저질렀던 반인륜 범죄인 고문가해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정치권에서 퇴출 시키는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보연대는 선포식을 마친 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영등포 구청의 요청으로 경찰이 장비를 실은 차를 아예 막아서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서 결국 천막은 설치되지 못했다. 더욱이 농성을 벌이던 사람들이 대부분 노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뚫자리를 깔고 앉아 시위를 벌이던 곳까지 뛰어들며 폭력을 휘둘러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하기도 했다. 군가협 회원 이연숙 씨는 "경찰이 갑자기 밀치는 바람이 뒤로 넘어져 팔과 다리가 아직도 아프다"며 경찰의 폭력 진압에 강하게 항의했다.

<기사 처음으로>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지난 22일 서울역 화장실에서 노숙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역 건물을 새로 지은 후 공간원들의 단속이 더욱 심해진데다가 작년에 문모 씨가 공간원의 구타로 사망함에 따라 노숙인들의 공간원에 대한 반감과 불신 수위가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불황으로 인해 노숙인이 증가되었는데도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겨울이 되자 공원에서 생활하던 노숙인들이 추위를 피해 실내로 들어옴에 따라 역사 안 노숙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겨울이 되면 매일 밤 동장군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노숙인들이 따뜻한 역사로 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만약 서울역사에 너무 많은 노숙인들이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당연히 사안에 노숙인들이 갈 곳을 마련해 주어야 했다. 하지만 반대로 단속만을 해대는 상황이다. 보니 서울역사에는 노숙인과 공간원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참에 하루에 두 명씩이나 동료들이 죽었고, 그 사인이 공간원의 구타라는 소문이 돌자 동료들 잃은 슬픔이 분노로 변한 것은 이해가 갈만하다.

더욱이 경찰이 철저한 현장검증을 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시체를 옮기려 했을 때, 노숙인들은 경찰이 사실을 은폐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노숙인들을 진정시키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설득과정을 생략한 채 물리적인 힘으로 노숙인들을 제압하고 시체를 옮겨 결국 이러한 처사가 노숙인들의 슬픔을 분노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격분한 일부 노숙자들이 역 대항할 집기를 던지며 거세게 항의하는 불상사로 이어졌다.

이틀 후에 경찰은 숨진 2명이 공간원의 구타 때문이 아니라 각각 간경화와 폐렴 때문에 숨졌다고 발표했다. 설령 사인이 구타가 아니라 병사였다 하더라도,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적으로 약속된, GDP 규모가 세계 12위인 국가에서 하루에 두 명씩이나 병원이 아닌 화장실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치료받고 죽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개선은커녕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반인권적인 발상을 내놓았다. 강제수용이란 바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죄도 없는 사람을 가두어 두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일어죽으나 맞아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이고, 한테 잠을 자는 것보다는 감옥이 더 나은 극한상황에 처한 노숙인이 행여나, 여차피 강제수용이라는 감옥에 갈 바에야 한풀이라도 하고 가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무슨 짓을 못할까?

서울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인 '치료받고 죽을 권리'마저 실현하지 못하고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죽은 친구를 잃은 슬픔과 분노에 찬 노숙인들을 강제로 수용 하겠다는 발상으로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서울시가 해야 할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서둘러 노숙인 복지제도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다.

◎류정순 님은 한국빈문제연구소 소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⑤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한뼉'을

인권 현장을 밝히는 필름

인권 영화를 좀더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자는 고민에서 2002년도 9월부터 시작된 인권 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아래 반딧불)은 2004년 1월부터 총 11차례 동안 인권의 현장을 '찾아가자'는 취지를 내걸고 움직였다.

인권 영화로 사람의 마음에 불씨를 띄우고, 인권의 심지를 향한 발걸음을 다독이자는 마음을 먹고 인권영화제를 시작한 지 9년째에 다다른 때였다. 인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에서 유행인 냥 오르내리기도 했다. 화려한 멀티플렉스관의 수많은 스크린은 볼록버스터들의 고유한 장식지가 되었고, 영화가 행동과 괴리된 사유의 대상인 듯 취급받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권영화제의 부피를 작게 만들되, 인권 운동의 현장에 힘을 실고, 반딧불을 찾은 관객들과 인권 현안에 관한 좀더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반딧불을 개편하고자 한 초심이었다.

인권운동과 좀더 밀접하게 결합하자는 취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우선, 시시각각 변하는 인권 운동의 흐름에 맞춰,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인권의 문제를 매달 주제로 삼아 해당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물론 관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2004년 2월 부안의 반핵열기가 민주주의 투쟁으로 한층 고조될 즈음,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는 주제로 영화를 상영했다. 더불어 핵폐기장 반대 투쟁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던 부안 지역 주민을 초대해, 부안에서 터져 나왔던 반핵민주주의의 생생한 외침을 나누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후, 성산업 붐과 우려와 사주 비호 논리가 팽배했던 지난해 10월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주제로 반딧불을 개편하여, 성매매를 둘러싼 왜곡된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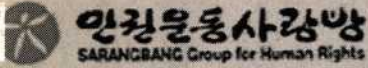
반딧불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인권 운동의 현장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3월에는 고용허가제, 단속주방을 반대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이주노동자들을 찾았다. 9월에는 불안정 노동이 야기한 빈곤에 허덕이는 대학 내 여성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일터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반딧불에서는 정부와 자본의 공조 아래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이자, 인권의 씨앗을 뿌리는 운동 주체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물론, 이들의 활동을 볼 수 있는 영상물을 상영하기도 했다. 또한 7월에는 어린이, 청소년의 시각에서 장애인권을 접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어린이의 눈과 마음에서 인권을 말할 수 있는 매체가 턱없이 미비한 실정에서, 영상을 매개로 어린이들과 인권을 나눌 수 있다는 소중한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반딧불의 실험이 초기에 직면했던 구조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쌓여 있다. 산재해 있는 인권 현안을 다루는 인권 영화의 제작과 배급 활성화, 안정적인 공간과 상영 지원 시설을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 인권 영화에 꾸준한 관심과 역량을 투여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 등 반딧불의 실험이 실험을 넘어서기 위한 갈 길은 아직 멀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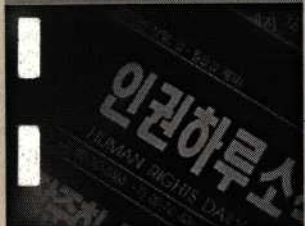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26일 (수)
제 27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정부가 노숙인 분노케했다
2.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3.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⑥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침해 조사
4. <알림> 2월 1일, 하루소식이 새로워집니다!
5. <알림> 유료독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노숙인 분노케했다

22일 서울역 노숙인과 경찰 대치 문제점 밝혀져

22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노숙인 사망사건과 그에 따른 경찰과 노숙인들 간의 충돌과 정에서 관련 당국의 잘못이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과 노숙인들을 중재했던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아래 노실사)이 25일 발표한 당시의 경위와 입장은 당국이 '노숙인의 인권을 철저히 도의시'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노실사에 따르면 22일 오후 서울역 몇몇 노숙인들 사이에서 "또 한 명이 죽었다"는 소문으로 울분을 삭이고 있었는데 역무원이 한 노숙인을 짐수레(가로80cm / 세로130cm)에 실어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기는 것이 목도되었다.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이동현 씨는 "위독한 사람에게겐 호흡 유지가 가장 일차적인 응급처치임에도 불구하고 짐짝처럼 실어 나른 것은 초동 응급처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며 "이 광경은 노숙인들에게 시신을 짐짝처럼 실어나르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노숙인을 흥분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노숙인 사이에서 "노숙인이 철도공간에 맞아 죽었다"는 말이 급속도로 퍼졌고 1백여 명이 넘는 이들이 역내에 모여들어 경찰과 대치하게 된 것. 노실사를 비롯한 노숙인 단체 활동가들은 중재를 통해 △노숙인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의료단체 의사가 와서 1차적으로 검안할 것과 △협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옮겨 노숙인들을 자극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활동가들이 남대문경찰서장 등과 협상하고 있는 사이 시신이 전격 빼돌려졌고 2백여 명으로 불어난 노숙자들은 이를 강하게 항의하며 역내 집기를 내던지고 경찰과 충돌했다.

노실사 대표 문현준 씨는 이번 사건이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 용의자 지목 및 동결기 동사 방지를 명목으로 관할 구역에서 노숙자들을 오히려 몰아내는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해 노숙인들이 관련 당국에 대한 불만이 매우 고조된 와중에 철도청과 경찰이 이들을 무시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사건이 보도된 후 서울시에서 흘러나오는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비판은 거세다. 이동현 씨는 노숙인들을 쉼터마저 거부하고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몰아가는 일부 여론에 대해 "노숙인 중 50% 이상은 이미 쉼터를 경험했다. 현재 1인당 1.4평 확보가 고작이며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4평'에 턱없이 못미친다. 성북구의 한 쉼터의 경우 25명 정원에 20명이 입소해 있는데도 잘 때 어께가 포개진다"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전한다. 또한 "쉼터 이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통신, 의출, 사생활 등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노숙인들은 체념하는 심정으로 거리로 다시 모여든다"고 덧붙였다.

<기사 처음으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조직적인 은폐와 왜곡으로 어둠 속에 숨겨졌던 국가의 반인륜적 범죄들이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으로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25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법국민위원회와 과거청산을위한국회의원모임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폭력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

리 과거청산법을 제정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언대회에서는 국가의 혹독한 탄압으로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사람들과 유족들의 울분과 피맺힌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1986년 이른바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으로 안기부로 끌려가 37일간 고문을 당했던 심진구 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군대시절 전방 근무의 기억을 살려 노트 한 장에 그린 그림을 '월북투트 지도'로 둔갑시켰고, 온갖 고문과 협박으로 간첩 혐의를 덧씌웠다. 심 씨는 "당시 대공수사단장이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수사관들에게 '간첩소리가 나올 때까지 더 죽쳐'라고 소리치며 고문을 지시했다"며 자신이 직접 그린 정 의원과 수사관들의 몽타주를 공개하기도 했다. 20년이 지났지만 당시 겪어야 했던 고문은 그에게 여전히 계속되는 악몽이다. 심 씨는 "불안신경증, 만성두통 등 고문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모세혈관이 파괴돼 걸기조차 힘들다. '빨갱이'라는 낙인은 가족들의 삶까지도 파괴하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안기부는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 조작해서 간첩을 만드는 기관이었다"며 울분을 토해 낸 김장길 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원하는대로 진술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폭행을 계속되었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부인과 애들을 데려다 너와 똑같이 발가벗겨 고문하겠다'는 협박에 결국 허위 자백을 하게됐다"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아직도 내가 왜 간첩혐의로 구속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지은 죄도 없이 0.78평의 어두운 방에서 9여 년의 청춘을 보냈다. 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죽는다면 차마 눈을 못 감을 것"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민족일보' 사건으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당한 조용수 씨에 대한 증언도 계속됐다. 조 씨의 동생 용준 씨는 "2심제로 재판을 끝내는 '혁명재판소' 설립은 군사쿠데타의 산물로 군사재판으로 민간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처벌했으며, 헌법에 보장된 3심제의 권리도 제멋대로 박탈한 '사법 살인'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정부와 사법당국이 그 잘못을 고백하는 일만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여운형 암살 사건과 진보당 조봉암 사법 살인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⑥ KT 상품 판매전담팀 인권침해 조사

노동 속 인권 찾기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의 만남! 이것은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운동의 과제인 동시에 인권운동의 과제인지 모른다. 노동과 인권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운동의 화두다. 그러나 둘 사이의 만남에는 계기가 없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반복되는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지쳐있는 노동운동에게 인권운동은 멀게만 느껴졌다. 아마도 장애인, 소수자운동 등 끊임없이 확장되는 인권운동 영역에 다가서지 못하는 노동운동이 인권운동가들에게는 답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그 두 운동은 만났다. KT 상품판매전담팀(아래 상판팀)에 대한 인권차별의 투쟁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면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빠르게 진행된 KT 민영화는 노동 유연화에 따른 대대적인 고용불안과 각종 복지후퇴를 가져왔다. 이런 과정에 발생하는 노동에 대한 공세는 참으로 심각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이를 노사문제로 제기하면서 싸워나갔다. KT 노동자들도 1998년, 2000년 파업을 하기도 했으며 소규모 집단에 의한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결과는 백전백패였다. 그 사이 정규직 2만5천 명, 비정규직 1만 명의 노동자가 KT를 떠나야 했다. 노동의 무력화에 자신감을 갖게된 회사는 강압적인 노동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퇴사를 강요하기 위한 퇴출 프로그램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다. 상판전담팀은 그 정점이였다. 상판팀은 대다수 비연고지로 인사조치 되었으며 대부분이 영업활동과는 거리가 먼 기술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상품판매 과정에서 일반 영업사원과는 달리 영업지원비 등에서 온갖 불리한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한마디로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였다.

이러한 차별과 불이익에 대해 해당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노조사무실 항의농성 등 노사문제 수준에서의 대응을 했다. 그러나 회사는 꼼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행, 감시 등의 차별을 강화했다. 이러한 일상적 차별과 감시로 인해 상판팀 노동자들은 발가벗겨진 채 인간적 밑바닥을 다 보인 것 같은 모멸감과 자괴감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노사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를 찾았다. 그리고 우리들의 호소에 인권회의는 "신자유주의 시대 인권침해의 주요 형태가 기업 내 인권침해"라며 적극적인 연대를 결의했다.

이 연대 결정을 계기로 인권회의와 상판팀 전국모임은 상판팀 해체를 위한 서명운동, 집단 설문조사, KT 반인권적 차별 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대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했다. 더 나아가 인권회의는 각 지역의 상판팀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로 올 꾸렸고, 전국 KT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이 소박한 만남은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의 만남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어쩌면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기업 내 인권침해에 놀라워하는 인권운동가들을 보며 노동자들은 그 동안 겪어왔던 억울함, 불안함, 주눅 든 자신들의 얘기를 눈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8월 뱀벌에 목이 말라 야쿠르트 하나를 사먹고 싶어도 회사의 감시가 두려워 스무 걸음을 움직이지 못했던 노동자, KT를 떠나지 못하는 자신이 한 스러워 눈물로 지내신다는 노동자, 옆의 동료가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노동자, 길을 가면 항상 뒤를 보며 골목길로 다닌다는 노동자, 운전 시 전방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을 주시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노동자 등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KT 상관팀 노동자들을 인권운동가들은 만날 수 있었다. KT 노동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 '경찰폭력 규탄'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을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을 느끼던 인권운동가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다.

그러한 만남은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냈다. 은 집단회를 진행하면서 KT 상관팀 노동자들이 겪어왔던 차별이 단순한 인권침해 수준을 넘어 정신 건강상의 문제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의료단체들과 함께 집단적인 MMPI(다면성 인성검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사자의 45%가 우울, 불안, 긴장, 공포, 신경과민, 공포, 피해의식 등을 시사하는 비정상적인 척도들을 보여주었다. 그 중 4명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은 점점 영역화되고 있다. 인권침해의 주요 유형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기업 내 인권침해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내 노동인권의 문제는 노사관계 수준의 문제로 은폐되면서 시민사회의 관심이 다소 멀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인권의식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인권의 수준은 그만큼 확장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었다. 노동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기업 내 노사관계의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어야 한다. 상관팀의 투쟁은 어쩌면 그 출발일지 모른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인권운동의 깃발 아래 이미 하나인지 모른다.

◎김미영님은 KT 전국상관모임 집행위원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2월 1일, 하루소식이 새로워집니다!

팩스신문 폐지하고 인터넷판 강화하기로

1) 팩스신문 폐지, 인터넷판 강화

<인권하루소식>이 창간될 당시 팩스는 인권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체였다. 하지만 1일 2면이라는 한정된 지면은 쏟아지는 인권소식들을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너무 좁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인터넷이 대거 보급되고 웹사이트를 통한 뉴스전달이 종이신문을 쇠퇴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때 <인권하루소식>이 팩스신문을 폐지하고 인터넷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문자 중심으로 전달되던 하루소식은 사진과 동영상 이 더해져 생동감 있는 현장소식을 담게될 것이다. 한편 팩스신문이 폐지되더라도 이 매일 발송방식과 함께 인터넷에 접근하기 곤란한 독자를 위한 우편발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전문성 갖춘 참신한 꼭지 대폭 추가

창간이래 <인권하루소식>은 사건에 대한 단순보도를 지양하면서 자본의 시각, 기성언론의 각과는 다른 인권의 시각을 제시해왔다. 새로 마련되는 다음 꼭지들은 인권전문지로서의 전문성과 진보성을 함께 갖춘 다양한 기사들을 담게 된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등 역사 속에서 인민들의 권리선언과 여러 인권 국제규약 등 역사 속에 파묻혀 있는 인권 문헌을 2주에 한번씩 발굴한다. 더불어 이들 문헌이 나온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의미도 소개한다.

<뛰어보자 폴짝: 어린이와 함께 읽는 인권소식>

어린이에게 들려줄 수 있는 쉽게 풀이된 인권 소식이 매주 한번 어린이 독자들을 찾아가다. 어린이 인권에 관한 소식, 혹은 일반적인 인권소식을 어린이의 눈높이와 감성에 맞춰 새롭게 쓴 기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간편 삶'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북돋는다.

<움툼>

'움툼'은 '움직이는 인권운동, 틈새를 연다'의 줄임말. 기존 인권 개념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인권의 시각,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인권운동의 발걸음 등 인권(운동)에 일고 있는 새물결이 2주에 한번씩 소개된다.

<인권, 영화를 만나다>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은 스크린을 통해 인권의식을 확산하려는 국내의 인권영화를

끊임없이 소개해왔다. 새로 신설되는 이 쪽지는 이른바 '인권영화'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상업영화를 포함한 모든 영화에 인권의 잣대를 갖다대어 때로는 찬사를, 때로는 때론 비판을 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좋은 인권영화를 소개하는 역할 또한 계속된다. 매주 1회.

3) 기존 쪽지 개편

새로운 쪽지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쪽지 중 일부 쪽지를 개편한다. 한 주, 한 달의 인권 흐름을 한 눈에 그려주던 '주간인권흐름'과 '이달의 인권'이 폐지되고, <클릭! 인권정보자료>와 <즐거운 물구나무>가 2주에 한번 독자들을 찾아간다. 나머지 쪽지인 <인권 이야기>와 <만화사랑방>, <논평>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유료독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이 개편됨에 따라 유료독자 중 구독중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팩스신문이 폐지되므로 팩스독자 중 계속 구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구독방식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27일 (목)
제 27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경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유예된 권리, 투쟁으로 되찾자
2.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3.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⑦ 3.8 여성 무지개 시위 2004

유예된 권리, 투쟁으로 되찾자

'버스를 탑시다' 41회차로 막내려

'장애인과 함께 버스를 탑시다'(아래 버스를 타자) 행사가 26일 41차 집회를 끝으로 마감했다. 지난 2001년 1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며 2001년 6월부터 이 행사를 주관해왔다. 3년이 넘는 치열한 투쟁은 지난해 말,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라는 쾌거를 쟁취했다. '버스를 타자'는 이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처절한 투쟁임을 세상에 각인시켰다. 1차 행사부터 시작된 경찰의 진압으로 장애인들은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묶는 등거세게 저항했고, 길가던 시민들은 이들의 주장과 몸부림에 서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해화동 로터리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경석 공동대표는 "버스 안에서 4시간, 10시간씩 갇혀 있으면서 '권리'를 이야기했다. 아차산에서 집회를 진행할 때 동부경찰서는 우리가 탄 버스를 통제로 연행"하기도 했다고 투쟁의 기억을 말했다. 이어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을 말하고 있지만, 투쟁을 통해 그 기간을 더 빨리 앞당기자"고 주장했다.

공동대표인 박영희 씨는 "남의 도움 없이는 버스나 지하철도 못타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것이 장애인다운 것 아니었다! 우리는 이 싸움으로 '장애인답다'라는 편견을 깨고 '인간다운'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버스를 타자'의 의의를 밝혔다.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 류홍주 위원장 역시 "동지들이 자랑스럽다. 중증장애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기도 했다.

<기사 처음으로>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했을 때 정보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를 감시·감독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예방적 기능·정책조언기능·사후적 민원해결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인정보감독기구

로서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현재의 국가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명령권 없이 권고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감독 및 구제기구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의 안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견제·예방 기능으로서 집단진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정부 안은 집단진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 감사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윤 정책연구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사후구제 조치를 현행 수준 이상으로 진전시키지 못한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개인정보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고 강력한 사후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개의 사회단체로 구성된 연석회의가 준비해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기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출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준비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지난 24일 공청회를 거친 후 열린우리당이 은영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⑦ 3.8 여성 무지개 시위 2004

차별과 싸우는 다름으로 닮은 여성들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아래 다담연대)는 장애여성공감,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OW, 그리고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도임 끼리끼리가 2003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결성한 비주류 여성 단체간 연대체다. 이 단체들은 2002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중심의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와 별도로 행사를 꾸려오다가 2003년 무지개 시위를 기점으로 상설 연대체를 구성했다. 즉, 다담연대는 기존 여성운동의 이성애·비장애 중심적 관행과 의제 선정 등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여성들 간의 수평적 교감과 연대를 꿈꾸며 태동했다.

다담연대는 사안별 연대를 지양하고 일상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활동들을 만들어 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무지개 시위 'WOW! 또 다른 세상을 공감하기, 3.8 여성무지개시위 2004'(아래 무지개 시위)였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가족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대안적 상상력: 무지개포럼'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WOW! 또 다른 세상을 공감하기, 3.8 여성무지개시위 2004'를 열었다. 이 두 가지 행사는 2003년의 행사와 다담연대의 결성 이후 일년간의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자리였다. 세 단체가 차례대로 주관하는 세미나를 2003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진행했고, 이를 통해 무지개 시위의 기초를 잡아나갔다. 장애인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그저 여성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장애여성의 문제를 함께 고민했다. 또한 동성애자라고만 하기에 부족하고 역시 그저 여성이라고만 하기에 부족 한 삶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레즈비언의 문제를 같이 나누었으며, '국민'의 이름에 갈리지 않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의 조건들을 공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담연대는 일상 속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를 짚어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여성으로서 받는 이 사회의 억압과 차별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고,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너무나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기에 저마다 달리 느낄 수밖에 없는 가부장제의 다층적인 억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서로서로 기울이는 끈질긴 노력을 통해 '여성'이라는 뭉뚱그려진 이름이 가려버리는 다양한 현실들을 좀 더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2004년 무지개 시위의 실무 준비 과정과 당일 행사 현장 등에서 아주 구체적인 성과들로 드러났다. 끼리끼리 활동가들이 자신의 아웃팅을 덜 두려워하며 다른 단체 자원활동가들과 관계 맺을 수 있었던 것,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들이 행사 준비 과정에서 덜 불편한 공간을 이용하여 회의하고 연습할 수 있었던 것, 다담연대의 모든 활동가들이 억지로 감수해야 할 불편함 없이 거리 행사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행사에 임박해서 했던 준비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강하게 쥐고 온 고민의 실마리들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 기획단과 자활단을 통틀어 어떤 위계서열도 존재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단 한 사람의 끼리끼리 활동가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웃팅 당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이동의 문제를 고려하여 행사장을 고르고 무대를 설치하고 행사 진행 순서를 짜는 일들은 모두, 일상적인 노력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종류의 실천들이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무지개 시위 당시 배포했던 '연대의 기본'과 관련된 '매뉴얼'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또 하나의 성과는 무지개 시위를 통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슬한 차별의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 내부의 억압의 문제, 부모와 아이들로 구성된 가정만이 '정상 가족'이라는 편견 속에서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해 온 사회의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동가들 스스로가 먼저 서로의 차이에 대해 공감하고

자했던 그 노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스스로가 속해 있는 운동의 영역으로부터 고민을 풀어나가는 것, 그것은 대사회적 발언의 실질적인 영향력 역시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일상의 실천인 것이다. [케이]

© 케이 씨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28일 (금)

제 27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기아차 채용비리사건'의 몸통
2.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3. '단체복 안벗으면 해고한다'
4. ≡ 클릭! 인권정보자료
5. 2월 1일, 하루소식이 새로워집니다!
6. <알림>

<논평> '기아차 채용비리사건'의 몸통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채용비리를 계기로 이에 연루된 노조 간부에 대한 못매가 쏟아지고 있다. 결국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이 구속됐고 기아차노조는 집행간부 총사퇴를 결정했다. 노조는 관행처럼 진행돼온 인사청탁의 근절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미 사측에 보냈고 단체협약에도 이를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에 눈먼 일부 노조 간부들은 결국 사측의 매수놀음에 돌아나고 말았다. 노동운동이 자본의 피해를 달아버리는 순간 존재의 기반조차 상실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운동은 더욱더 억압받는 민중들과 가까이 연대하는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수 언론들의 '노조매리기'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들은 이번 일을 마치 대기업 노조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며 대기업/중소기업으로, 또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노동자를 분할했다. 전형적인 자본에 의한 분할통치 구조다. 게다가 '황색언론'은 꼭필을 휘둘러 '취업장사', '귀족노조' 등의 선정적인 문구로 여론의 낙인을 찍는데 집중했다. 보수 언론들의 '노조 죽이기'는 당정이 오는 2월 그동안 노동계가 반발해온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모론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욱더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사측의 채용비리'에 있음을 확인한다. '청탁'이라는 이름으로 입사를 둘러싼 이권을 정치인, 공무원, 노조간부 등이 나눠 갖고 사익을 쟁겨온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이는 사측이 노조를 비롯한 각 이익집단을 '길들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검찰이 26일 밝힌 100여 명의 청탁자 명단에는 장관급 고위인사, 정치인 등의 공직자와 각계 유력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사회 전반의 비리와 부정에 경종을 울리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불행히도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었다. 학연·지연 및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채용 차별은 우리 사회가 광범위하게 묵인해온 것이기에 더욱더 절망스럽다.

아무도 풀을 수 없을 것같은 바위라도 그곳에 뿌리내리는 것은 언제나 여리고 파란 새싹이다. 간신히 최저임금만 받으면서도 일상적인 고용불안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의 새로운 가치를 환기시키고 있고,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사측의 불법파견에 맞서 비정규직노조가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은 애써 이를 모른척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단단한 바위에 여린 뿌리를 내리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바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노동운동의 '몸통'이다.

<기사 처음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런 지장도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 온 것.

이와 관련해 27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에 공소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범죄를 승인하는 결과가 되며, 범인도 형벌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누려오는 등 공소시효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등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범행의 조작·은폐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 정지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했다.

고 최중길교수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지방법원 제23민사부(부장판사 이력우)의 판결은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2003년 8월 서울지방법원은 고 수지검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가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 책임을 물어 유족들에게 4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최 교수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법원의 판결에만 기대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것. 최 교수의 아들 최광준 씨는 "법원에서는 1987년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지만 한 개인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한 형법권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반인도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의 소급적용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이 요구하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민사상의 소멸시효 적용 배제도 중요하지만 반인도적인 국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정에 세워져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가해자에 대해 공직에서 추방하는 등의 처벌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앞으로 "대공수사기관이라는 국가권력의 조직적 지원 하에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퇴출 운동과 더불어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단체복 안벗으면 해고한다"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 노동권에 빨간불

"노조단체복을 벗지 않으면 재계약에 불이익을 주겠다" "자식들에게까지 손배가압류로 손해가 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이 27일 발표한 성명은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알리고 있다.

주로 청소와 시설관리직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받는 실질임금은 약 50만원 정도. 최저생계비 64만 184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02년부터 노조를 결성해 임금인상과 계약 해지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하청업체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해왔다.

최근 병원 측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병원 안팎의 집회 금지는 물론 현수막·벽보 부착 및 홍보물 배포를 금지했다. 심지어 조합원 66명을 상대로 '집회·시위 개최금지 및 업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12일 광주법원은 이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내용을 살펴보면 집회 금지는 물론 △병원 규정 복장 외의 단체복 착용 금지△병원 내에서 허가하는 장소 외에 현수막, 게시판 설치 금지 △환자 등을 상대로 서명 금지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정당한 근로행위 방해 금지 등 광범위한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청노동자들은 1일 1백만원 씩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병원부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어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병원 측의 탄압은 도를 넘어 총무과 및 하청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하청노동자들을 감시하며 집회나 유인물 배포 시 폭력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다. 강신원 노조지부장은 "심지어는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도 단체복을 강제로 벗기기도 한다"고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전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성명에서도 이들이 환자보호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진이나 캠코더를 들이대고 수시로 사진을 찍고 있으며 "집에 빨간 딱지 붙인다"는 등 협박을 일삼아 청소여성노동자들이 잠도 제대로 못자고, 한 노동자는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대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하청노동자는 약 4백 명이다. 그 중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80여명 정도.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계약해지로 인해 해고되었다는 강 지부장은 병원 측의 탄압이 너무 심해서 노조에 가입했다가도 탈퇴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한다

다.

보건의료노조 김성주 선전부장은 "전남대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몇 안 되는 국립병원이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일반 병원보다 비정규직 고용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노동3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역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2005년 1월

2004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들이 묶여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으로 만들어 졌다. 진보정당 및 초선 의원의 대거 원내 진출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한 탓인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는 예년에 비해 양·질적인 면에서 풍부하다.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감옥에 관한 통계는 무척 자세히 보고되고 있다.

또한 복 인권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대테러 조치 등 2004년 주요 인권 현안과 관련된 정책·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감시할 때 근거자료로 이용 되는 것은 물론 인권현황을 모니터 하거나 인권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권정보자료실은 지난 1998년부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 중 인권에 관한 것들만을 모아 재가공 해왔다. 2004년에도 천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가 상임위 별, 주제별로 묶여 있어서 이용자들은 편하고 쉽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방문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원자료는 국회도서관 의회자료실에서도 볼 수 있다.

□ 자료 제공 주요 상임위: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 자료문의: 인권정보자료실 (02-741-5363) [최은아]

<기사 처음으로>

2월 1일, 하루소식이 새로워집니다!

팩스신문 폐지하고 인터넷판 강화하기로

1993년 9월 7일 창간되어 지난 10여 년간 인권전문 팩스신문으로 자리매김해 온 <인권하루소식>이 2005년 2월 1일자(제2745호)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1) 팩스신문 폐지, 인터넷판 강화

<인권하루소식>이 창간될 당시 팩스는 인권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체였다. 하지만 1일 2면이라는 한정된 지면은 쏟아지는 인권소식들을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너무 좁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인터넷이 대거 보급되고 웹사이트를 통한 뉴스전달이 종이신문을 쇠퇴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때 <인권하루소식>이 팩스신문을 폐지하고 인터넷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문자 중심으로 전달되던 하루소식은 사진이 더해져 생동감 있는 현장소식을 담게 될 것이다. 한편 팩스신문이 폐지되더라도 이메일 발송 방식과 함께 인터넷에 접근하기 곤란한 독자를 위한 우편발송(주1회)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전문성 갖춘 참신한 꼭지 대폭 추가

창간 이래 <인권하루소식>은 사건에 대한 단순보도를 지양하면서 자본의 시각, 기성언론의 시각과는 다른 인권의 시각을 제시해왔다. 새로 마련되는 다음 꼭지들은 인권전문지로서의 전문성과 진보성을 함께 갖춘 다양한 기사들을 담게 된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등 역사 속에서 인민들의 권리선언과 여러 인권 국제규약 등 역사 속에 파묻혀 있는 인권 문헌을 2주에 한번씩 발굴한다. 더불어 이들 문헌이 나온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의미도 소개한다.

<뛰어보자 폴짝: 어린이와 함께 읽는 인권소식>

어린이에게 들려줄 수 있는 쉽게 풀어쓴 인권 소식이 매주 한번 어린이 독자들을 찾아간다. 어린이 인권에 관한 소식, 혹은 일반적인 인권소식을 어린이의 눈높이와 감성에 맞춰 새롭게 쓴 기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간헐 삶'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복돋운다.

<움푼>

'움푼'은 '움직이는 인권운동, 틈새를 연다'의 줄임말. 기존 인권 개념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인권의 시각,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인권운동의 발걸음 등 인권(운동)에 일고 있는 새물결이 2주에 한번씩 소개된다.

<인권, 영화를 만나다>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은 스크린을 통해 인권의식을 확산하려는 국내의 인권영화를 끊임없이 소개해왔다. 새로 신설되는 이 꼭지는 이른바 '인권영화'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상업영화를 포함한 모든 영화에 인권의 잣대를 갖다대어 때로는 찬사를, 때로는 매서운 비판을 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좋은 인권영화를 소개하는 역할 또한 계속된다. 매주 1회.

3) 기존 꼭지 개편

새로운 꼭지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꼭지 중 일부 꼭지를 개편한다. 한 주, 한 달의 인권 흐름을 한 눈에 그려주던 '주간인권흐름'과 '이달의 인권'이 폐지되고, <클릭! 인권정보자료>와 <즐거운 물구나무>가 2주에 한번 독자들을 찾아간다. 나머지 꼭지인 <인권 이야기>와 <만화사랑방>, <논평>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유료독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이 개편됨에 따라 유료독자 중 구독중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팩스신문이 폐지되므로 팩스독자 중 계속 구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구독방식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5년 01월 29일 (토)

제 27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팩스신문을 보내며
2. 다시 평화의 날을 꿈꾸며
3.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4. <알림>2월 1일 인권하루소식이 새로워집니다!

팩스신문을 보내며

새벽을 깨우는 혼과 정성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로 <인권하루소식>의 '팩스'시대가 끝난다. 여러 기억이 밀려든다. <인권하루소식>이 나오던 첫날, 국보법 폐지 농성장으로 삐걱하게 글씨가 들어찬 시커먼 팩스용지를 흔들며 달려오던 사람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팩스신문의 초창기 시절, 활동가가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권하루소식>을 밤새 만들고 쓰러진 사람들의 뒤를 이어 팩스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일이었다. 잘 들어가지 않는 번호일 경우 네다섯 번씩 재발송해야 했다. 새벽 4-5시경에 발송되는 팩스 때문에 24시간 근무체계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았고, 사무실의 전화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울려댔다. 오죽하면 '하루소식은 114'라는 농담도 오고갔다. 이사 다닐 때마다 재산 목록 1호로 조심스레 옮긴 것이 팩스였고 그간 흑사당해 수명을 다한 팩스가 여러 대다. 동고동락했던 팩스가 수차례의 수리 끝에 결국 사랑방에서 내보내질 때마다 정든 이와 헤어지는 듯한 가슴 시름을 느끼기도 했다.

1993년 '인권전문팩스신문'을 창간하게 된 것은 '문민정부'라는 허울좋은 말에 온 언론이 취해 돌아가면서 인권문제는 만사해결되었다는 근거 없는 청산주의가 판을 쳤기 때문이다. 양심수로만 얘기되는 좀더 좋은 인권의 개념을 확장하고 재해석할 매체가 필요하다는 고민도 컸다. 그러던 어느날, 사무실 책상 위에서 잠자던 한 인권운동가가 사라졌다. 장기수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과거'에 걸려 남영동으로 끌려간 것. 그를 구명하기 위해 하루에 몇 차례씩 사진 속보를 만들어 알만한 모든 곳에 팩스를 날렸다. 기다렸다는 듯 청와대와 안기부로 세계 곳곳의 항의서한이 날아들었고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정황을 물어왔다. '세계 유일의 팩스신문이자 인권일간지'란 평가를 받은 기획은 이런 경험을 통해 탄생했다. 당시 빠르게 보급된 팩스가 기획으로만 존재했던 인권신문의 '배달'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어떤 주간신문보다도 먼저 돌돌 말린 팩스신문이 배달되었고, 같은 사건이라도 인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주 5일 만들어지는 소식은 그 속보성에서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할도 독특히 해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인권신문의 역할도 달라지게 됐다. 이제 인권사건에 대한 단 순보도를 넘어 깊은 분석과 해석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그러나 두 장의 팩스신문에 가까스로 우겨 넣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게 됐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속보성 보다는 인권의 시각을 전하는 일이 더 큰 임무가 됐다.

고심 끝에 분량과 편집의 제약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팩스신문의 틀을 벗어 던지는 대신 하루소식의 깊이를 더 파기로 한 것이다. 팩스 시대를 넘은 것은 전달 도구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인권인식과 요구가 달라진 것을 뜻한다. 외면 받던 인권이 사회주류층의 언어가 되고 인권담론이 양적으로 증대되면서 인권의 시각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레토릭이 아닌 진짜 인권이 모색해야 하는 대안에 대한 요구, 민중운동과 인권이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벽 돌돌 말린 팩스신문에 담았던 혼과 성의를 똑같이 다 큰 매체에 담아갈 것이다. <인권하루소식>의 사명은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이다. 사무실 벽에 팩스 <인권하루소식>을 꼼꼼히 꽂아 두었던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 깨알같은 편집에 읽기 어려운 팩스를 소중히 다뤄줬던 모든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더 깊고 넓은 길을 헤쳐가야 할 인터넷 <인권하루소식>의 시대에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사 처음으로>

다시 평화의 날을 꿈꾸며

<인권하루소식>이 창간된 지 벌써 11년 5개월이 되었다. <인권하루소식>을 창간하고, 하루하루 팩스를 보내던 날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끔찍함이 물려와 두려움이 앞선다. 어떻게 그 긴 하루들을 보냈는지 아득하기만 하다. 사실 그동안 나를 이어 <인권하루소식>을 맡아 섬겼던 달려온 수많은 활동가들에게 미안하였다. 괜한 짓을 해서 활동가들의 생명을 많이도 단축시켜 놓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인권하루소식>을 폐간하자고 몇 년 동안 주장해왔는데, 팩스신문을 마감한다고 하였을 때 아쉬움보다는 기쁨이 더했고 이제서야 조그마한 성과를 거둔 것 같다.

오늘 <인권하루소식> 창간사를 다시 읽어보았다. 진실을 전달하는 데 주저함이 없겠다고 다짐했던 <인권하루소식>이 93년 9월 7일 창간될 때에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권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언론에서 인권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절박함에서 탄생하였다. 인권운동을 한다는 우리들이 옆에서 동료가 남영동으로 잡혀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전하면서 길어 올린 창작품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을 걱정해 주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매일 낼 수 있나?", 소식이 얼마나 된다고 일간지를 내느냐는 등등의 걱정과 회의스러운 반응 속에서도 정 쓸 기사가 없으면 '오늘은 평화의 날입니다'라고 보내면 되겠지라는 배짱으로 시작하였지만, 오늘까지 단 하루도 평화의 날은 없었다.

<인권하루소식>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팩스신문이 창간 당시에는 최첨단의 대체였음에도 팩스라는 한계 때문에 속명적으로 지녀야 했던 약점으로 <인권하루소식>에서 소외되었던 인권정보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로운 출발에 나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에게 건강하게 살아남았음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염규홍/인권하루소식 창간 편집인]

<기사 처음으로>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장애인인 누나가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거꾸로 누나가 곤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26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의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방안 연구결과발표회'에서 홍영선 씨는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누나가 경찰조사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이같이 말한다. 연구소는 9개월 동안 피의자 또는 피해자 신분의 여성장애인 31명을 직접 면담해 형사절차에서 드러나는 장애인, 성의 인권침해를 전반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박노현 방호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해 6명의 연구원들이 9개월 동안 진행했다.

이은미 공동연구원은 "형사절차상에 있어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특성에 주의하지 않으며 무관심을 드러내 이들에 대한 차별과 홀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체포나 구금 과정에서 오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비장애인들에게도 나타난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등에 있어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비장애인과 같은 취급된다. 사례로 제시된 '미란다 원칙 미고지', '영장 없는 임의동행' 등은 비장애인들도 겪는 인권침해이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으로 이미 차별로 인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한 심각하다. 장애별 특성에 따라 보조인 및 다른 장치(점자, 수화통역 등)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의사소통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은 피해자나 피의자가 고소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 쪽 눈 실명' 등 눈에 띄지 않지만 특수한 장애의 경우는 인권침해를 더 많이 당한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설 면에서도 철저하게 비장애인,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난방 또는 제대로 된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무리하게 수용을 하거나, 남자 수사관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구조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여성으로서 불편함과 수치심 또한 느껴야 했다. 더군다나 하반신 장애가 있는 경우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분석내용을 기초로 여성장애인 인권증진방안이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었는데, 고영선 변호사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이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절차상이나 제도적으로도 여성수사관을 확충하는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는 "휠체어를 교도소에서 쓸 수 없는 현실을 비롯하여 구금시설 내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며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 시설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모든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인권의식을 키우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을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전담반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번 조사가 중요한 출발이 되었으나 형사절차 상 불거지는 모든 문제를 열거하고 있어 여성장애인으로 특화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2월 1일 인권하루소식이 새로워집니다!

팩스신문 폐지하고 인터넷판으로 강화

새로운 쪽지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권문헌들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의미

<뛰어보자 풀책: 어린이와 함께 읽는 인권소식>
어린이에게 들려줄 수 있는 쉽게 풀어쓴 인권소식

<움틀>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인권운동의 발걸음

<인권, 영화를 만나다>
상업영화에 까지 인권의 잣대로 들어다본다.

기존 쪽지 개편

'주간인권흐름'과 '이달의 인권'이 폐지. <클릭! 인권정보자료> <즐거운 물구나무> <인권이야기>와 <만화사랑방> <논평>은 그대로 유지.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